

‘김경수 광복절 복권’ 놓고 여야 정치권 ‘술렁’

민주, 환영속 친명계 “분열 노리나” 국힘 친한계 “정치행위 상의했어야” 친윤계 “대통령 고유권한 존중해야” 김경수 “사회 위해 보탬 역할 고민”



노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여전하다. 앞서 민주당 내 반응은 미묘하게 갈렸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친문 핵심인 김 전 지사

복권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친명계 일각에선 이재명 전 대표 체제를 흔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은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지사의 복권은 더 큰 민주당이 되는 기회이자 민주당 인적 자산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경쟁을 통해 지지받는 분이 대선후보가 되면 국민과 함께 완전한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고 환영했다.

‘이재명 일극 체제’를 비판해온 김두관 당 대표 후보도 “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리고,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 내에서 다양한 대선 주자들이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친명계에선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이재명 체제’의 균열을 바라는 여권의 노림수라며 경계하는 기류가 읽혔다.

친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은 지난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전 지사가 억울한 면이 있어 복권에 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당에선 이를 야권 분열용으로 시기에 맞춰서 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경태 의원은 “복권 노력은 필요하지만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 복권을 하는 건 떨어뜨리는 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올 경우, 복권한 김 전 지사의 행보가 당내 역학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관측이 적지 않다.

김 전 지사는 복권으로 2027년 대선 출마 길이 열렸다.

김 전 지사는 현재 독일 에버트재단 초청으로 베를린에서 6개월 일정의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귀국할 예정이다.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며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 복권을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에선 정면 충돌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둘러싸고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간 심각한 이견이 노출됐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당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알려진 바와 같이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을 것 같다”며 결정된 것이기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한 대표 측근 그룹에선 대통령

실을 겨냥한 수위 높은 발언이 이어졌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왜 이런 판단이 내려졌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여당과 상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상수 대변인은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어제 우리 당 4선 의원들이 거의 한목소리로 복권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냈고, 우리 당 게시판에는 6000개가 넘는 복권 반대의 글이 지금 쓰여지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반면 친윤계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공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 속에 있는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 결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김대중평화센터, 18일 DJ 서거 15주기 추모식

정·관계 인사 등 600여명 참석

김대중평화센터(이사장 김홍업)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립 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김대중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모식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김성재 김대중평화센터 상임이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우원식 국회의장의 추모사,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권한 대행의 추모사 순으로 진행된다.

추모영상 상영, 추모노래, 함세웅 신부의 추도예식, ‘김대중 육성회고록’(한길사) 헌정식, 유족 인사에 이어 대통령 묘소로 이동해 헌화와 분향이 이뤄진다.

추모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대표, 박찬대 권한대행,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 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와 정부를 대표해 홍철호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 그리고 노재현·김현철·노건호씨 등 전직대통령 자제가 참석한다.

또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이재명·김두관 후보와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김덕룡 민주화추진협의회 이사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원기·임채정·문희상 전 국회의장, 김석수이낙연·김부겸 전 국무총리,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김명자 KIST이사장, 한광욱 전 대통령비서실장, 장충식 단국대 명예이사장, 한화갑·김옥두·남궁진·정균환·이석현·박지원·추미애·김민석 등 전·현직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대표 등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심의·의결 및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한다. 뉴스스

전남도 “김문수 의원, 순천대 공모 참여 촉구 환영”

순천시민들 “독단적 행동” 성토

전남도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사진)이 ‘순천대 공모 참여 촉구’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양 대학이 공모에 참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공모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문수 의원은 전남 입장문을 통해 “전남도 공모 절차에 불참하는 것은 순천대 의대 유치 가능성을 사실상 0%로 만드는 행위”라며 “순천대 의대 유치를 위해 즉각적인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전남도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김문수 국회의원께서 순천대의 의대 유치 전략 전환 시급성을 언급하며, 전남도 공모 참여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깊은 감사와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전남에 국립의대 설립 대학 추천을 요청했고, 그에 따라 전남도는 정부 추천 대학 선정 공모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민주성에 충실히 입각한 공모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목포대와 순천대 양 대학 교직원에게 별도로 별도의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해, 공모 과정에서 도민과 대학 및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양 대학이 모두 공모에 참여하도록 적극 노력해 도민 모두의 건강권을 지키고 도내 전 지역의 의료체계를 완성하는 국립의대 설립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상생과 화합의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의 입장 선회와 관련, 순천 지역 사회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순천시민들은 “순천시, 순천대와 함께 협력해도 의대 유치를 장담 하지 못하는 상황에 불공정 우려가 있는 전남도의 손을 들어주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순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를 마치 정답을 발표하는 것처럼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오지현·순천=배서준 기자

노란봉투법·25만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尹, 21번째 거부권 수순

정부가 13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취임 후 21건의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25만원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두 법안 심의·의결에 앞서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계

속되고 있다”며 “특정 정당과 진영의 이해관계만 대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대규모 국제 발생은 오히려 물가와 금리를 상승시켜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헌법상 최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두어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묻지 못하게 함으로써, 산업 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일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인 오는 20일 전까지 재가하면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해 취임 후 총 19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 재결결 절차를 밟게 된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간호법 등 민생법안 8월 국회서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하면서도 민생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

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간호법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전세사기 피해지원법 등 3개 법안은 8월 본회의가 열리면 법사위를 거쳐 안전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8월 임시회 본회의는 확정은 아

니지만 28일로 예상된다”며 “일단 비정전 법안 관련해서는 합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여야 정책위 실무자가 만나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 “대통령이 오히려 거부권 행사하면서 여야 협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상황”이라며 “대통령실이 먼저 변화를 보여줘야 협의체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